

가격 및 수량을 확정한다.

③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가할당 하는 경우, 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교부는 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일자에 하며, 배출권을 추가할당 받고자 하는 자는 취득가격에 취득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거래소의 수수료 및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추가할당 이전에 결제계좌(결제은행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3조(수수료 등)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유상할당과 제11조에 따른 추가할당을 시행할 때에는 거래소의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배출권의 유상 할당,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제2018-72호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32호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79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49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5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영 제40조제6항에 따라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외부사업에 관한 총괄조정, 인증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주체를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안 제4조, 제7조 등)

나.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의 인정에 관한 기준 마련

- 국내 기업이란 국내 할당대상업체, 회사 등 국내 법인, 국내기업의 100% 자회사인 해외법인 등을 포함(안 제8조)

- 국내기업 등이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기준으로 ①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운영권을 20% 이상 소유한 경우, ②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사업에 주주로 참여하여 20%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포함(안 별표9 신설)

다. “정책 감축사업”이란 용어를 의미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변경(안 제9조, 제11조 등)

라. 주무관청의 심사·검토에 대한 기간 등을 규정하여 외부사업 관련 업무처리의 예측가능성 제고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평가 결과 통보(안 제13조)

- 방법론 승인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평가 결과 통보(안 제20조)

마.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던 상쇄등록부 계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지침으로 이관하여 규정(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8)

바. 산림분야로부터 발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산림예치 규정으로 이전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10 신설)

(환경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환경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배출권거래”를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부문별”을 “법 제30조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외부사업 참여자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보유하는 계정으로서 외부사업”을 “외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인증실적”을 “인증실적 및 산림의 손실 등으로 인하여 산림예치량 중 외부사업 참여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인증실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영 제39조제7항”을 “영 제39조제6항”으로, “등록”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부칙 제3조”를 “영 제40조제4항”으로, “등록하거나”를 “인증 또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제39조제6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국내 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할당대상업체

나. 가목 외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내 기업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

제8조제2항제4호(중전의 제3호) 본문 중 “외부감축실적”을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축량”을 “인증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제3호의 국내 기업 등이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기준은 별표 9를 따른다.

제9조제2항 중 “상당량”을 “상당량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목음 감축사업의 총”을 “총”으로,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소규모 목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감축사업의 경우 이산화탄소 상당량”을 “목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책적으로”를 “일관된 사업 목적에 따라”로, ““정책 감축사업””을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정책 감축사업으로”를 “프로그램 감축사업 및 해당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으로”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 총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공식 승인한 날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제1항과 같다. 다만, 프로그램 감축사업 내 최초로 시작된 단위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보다 선행할 수 없다.

제10조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사업의 경우에도,”를 “사업도”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책 감축사업에”를 “프로그램 감축사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책 감축사업에”를 “프로그램 감축사업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동조항 각 호의 국내 기업 등(다목의 경우 그 기업 등의 모회사 포함)이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9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려”를 “고려(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사업별 기준을 추가로 고려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9조에 따른 소규모,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디번들링 평가의 적절성

11. 제9조제4항의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계획의 적절성

제13조제6항 중 “해당”을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수정·보완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 정책 감축사업”을 “환경부장관은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요청하고”를 “요청하고,”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를 “통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부사업”을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수정·보완서류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외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6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항 중 “따른에 따른”을 “따른”으로, 같은 항 및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요청하고”를 “요청하고,”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방법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를 “통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방법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중 “승인방법론”을 “승인 방법론”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량이 1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이상일 경우 감축량 인증 신청이 가능하고, 감축량 인증은 정수단위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국문”을 “제17호의2 서식에 따른 국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사업 유형별 기여 비율에 관한 서류(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에 한함)

제32조제5항 중 “외부사업 사업자에게”를 “인증 신청 또는 신청자료를 제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사업 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요청하고”를 “요청하고,”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를 “통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인증실적의 발행 및 처분”을 “외부사업 인증실적 관리”로 한다.

제36조 제목 “(인증실적의 발행)”을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승인된”을 “인증된”으로, “정수단위”를 “등록된 외부사업에 대한 발행계정에 정수단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 제목 “(인증실적의 이전)”을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해당 거래에 대해 배출권 거래소가 청산·결제를 위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결제할 외부사업 감축실적을 통지하거나 결제지시를 하는 경우 영 제2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다.

- ③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배출권 거래소 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제1항의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신청 사항을 심사하여 이전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이전하는 경우에”를 “이전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인증실적을”을 “외부사업 인증실적을”로, “할당대상업체”를 “할당대상업체 또는 영 제8조에 따른 관리업체”로, “인증실적을 이전 받는 자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증실적을 발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인증실적 이전을 승인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한다.”를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증실적을 발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인증실적 이전을 승인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하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외부사업 방법론

### 4. 미활용 CER 일련번호

제7장에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보유계정 등의 등록) ①외부사업 참여자가 되어 보유계정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계정 신청서
2.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이에 준하는 서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
3. 제40조의4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동의서
4.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18세 이상의 자
2. 법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 명의의 보유 계정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 명의의 계정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한다.

제40조의 3(등록신청의 반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0조의2에 따른 계정의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40조의2에 따른 계정 등록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최근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
5. 계정 등록신청이 불공정거래 또는 위법한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계정 등록신청 반려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그 반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의 4(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 ① 계정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개인 계정의 경우 계정의 명의자 본인
2. 법인 계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 ② 법인 계정의 대표자는 2인 이하의 계정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보유계정에서의 외부사업 인증실적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와 제2항에 따른 계정관리인에 한한다.

제40조의 5(계정 정지)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보유계정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계정 정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 권리·의무 승계,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취소의 청산·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 계정인 경우에도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시킬 수 있다.

1. 계정을 자금세탁, 테러목적의 자금 유용, 탈세, 사기 등 범죄목적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잘못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계정의 사용을 시도한 경우
3. 계정대표자가 궤위된 경우
4. 계정 정보 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
5.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6. 권리의 승계를 신청한 경우
7.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승인 취소 사전 통보를 받은 경우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유계정 사용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계정 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40조의 6(계정 폐쇄)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보유계정의 폐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 폐쇄의 신청이 계정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보유계정의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취소계정으로 이전한다.

제40조의 7(계정정보의 갱신) ①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보유계정과 관련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주기적으로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년 말일까지 이를 통보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계정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계정대표자에게 정보의 갱신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40조의8(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변경) ①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은 지체 없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의 변경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의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비율

제5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의 외부사업 승인 심의 결과
2. 제21조제4항의 방법론 승인심의 결과
3. 제24조의 방법론 개정 심의 결과
4. 제33조제4항의 감축량 인증 심의 결과
5. 제35조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취소
6. 제44조제2항의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4조제1호 중 “인증실적”을 각각 “외부사업 인증실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증실적”을 각각 “외부사업 인증실적”으로 한다.

제56조 제목 “(권리의 승계 신청)”을 “(권리·의무의 승계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를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의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권리의 승계량은”을 “권리·의무의 승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분할할”을 “분할되거나 자신에게 속한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의무를 다른 업체에게 이전할”로, “업체”를 “업체 또는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업체”로,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를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의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권리의 승계량은”을 “권리·의무의 승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7조 제목 “(권리의 승계 승인)”을 “(권리·의무의 승계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7조에 따른 권리의 승계 신청 결과를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를 “제56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로, “해당”을 “신청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리”를 “권리·의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자가 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또는 영 제8조에 따른 관리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권리·의무 승계를 승인하며,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증실적을 발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권리·의무 승계를 승인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하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여부”를 “평가”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소규모 사업”을 “극소규모 또는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3호 중 “데이터”를 “고정 데이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기호(□) 중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권리”를 “권리·의무”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홈페이지(고시란)를 참조바랍니다.